

제7부

농업계 내 사회적 협의기구 추진 운동

*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월간 한농연”은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후 20년 격동의 역사를 겪어 온 한농연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총 10회 연재되는 “한농연 격동의 20년”은, 한농연 농권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다. - 편집자 주 -

※ 향후 연재계획

- 제1부 : 농어민후계자, 우리는 누구인가?
- 제2부 : 자주적 농권운동 단체로의 재정립
- 제3부 : 유통사업단과 품목위원회의 운영
- 제4부 : “WTO Kills Farmers” 세계화에 희생된 뛰어난 농민 이경해
- 제5부 : 아스팔트 농사의 열기 속에서
- 제6부 : 대선 후보 농정공약 채택 촉구 운동
- 제7부 : 농업계 내 사회적 협의기구 추진 운동**
- 제8부 : 농협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제9부 : 농축협조합장 및 지방의회 진출 운동
- 제10부 : 농업경영인, 우리는 누구인가?

1998년 농업회의소 설립 운동이 처음 전개돼

한농연은 범농업계의 의견을 집약하여 정책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실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일주체로서 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농업회의소 설립 운동을 추진하였다.

1997년 12월 대선 직후 “범농업인 21세기 농업개혁위원회” 내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1998년 2월말 국민의 정부 출범 후 한농연 등 총 35개의 농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농업회의소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농업계는 같은 해 4월 29일 “농업회의소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창립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농업회의소 발기인대회”는 2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3일간의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며, 10월에는 9개 주요 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농업회의소를 조속히 창립하고 법적 지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제화 작업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업계 내외부에서 많은 논란과 현실적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설립 운동은 난항을 겪게 된다. 1960년대 중반 제정돼 당시까지 명목뿐이었던 ‘농업기본법’을 실효성 있는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당시의 움직임 속에서, 동법 상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던 한농연과 농업계의 당초 계획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누락됐기 때문이었다.

이에 농업계는 별도의 농업회의소 관련 특별법 제정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국회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농업이 처한 특수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단체 총연합의 성격을 갖고 강력한 농정활동 기구로서 농업회의소의 위상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도 단위 농업회의소 건설에 박차를 가해 명실상부한 지역연합 조직으로서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1999년 이후 농업회의소 설립 운동은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1998년 이후 농협개혁 운동과 농가부채 경감대책 촉구 운동 등이 전개되면서, 농업회의소의 일주체로 참여했던 농협중앙회와 한농연 등 농업계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다. 이 속에서 참여 단체들의 부회장 정수 설정에 관련한 논의가 난항을 겪는 등 각종 문제점이 심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발전단계나 사업기능·행정업무 위탁 등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각 농민단체나 농협중앙회 등에 상당 부분의 업무 위탁을 해 온 상황에서 농업회의소의 명확한 사업기능을 재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2005년 정부·국회·농민단체간 3자간 협의기구 설립 논의

1990년대 후반 이후 주춤했던 농정 거버넌스(협치) 구현을 위한 움직임은, 2000년대 들어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어업특위)가 설립되면서 큰 획을 긋게 된다. 그러나 농어업특위가 정부의 쌀값 정책과 농가 소득보전 정책 등에 대한 사후 추진기구 역할을 강요한다는 농민단체들의 반발과 불참으로 인해, 본위원회 및 각종 분과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농어업특위는 당초 WTO 농업협상 및 FTA 협상 등에 대한 국내 농어업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큰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칠레 FTA 및 수확기 쌀값 파동 등 당면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와 농업계의 신뢰와 협의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정 협의·조정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를 반대했던 이경해 열사의 자결, 2004년 2월 한-칠레 FTA 국회비준, 2005년 11월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 국회비준 문제 등으로 정부와 농업계는 사사건건 날카롭게 대립했다. 정용품·오추옥 등의 농민들은 농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호소하며 자결했으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전용철·홍덕표 농민 등이 목숨을 잃게 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국회·농민단체간 3자 협의기구 구성을 통하여 쌀 재협상 비준 이후의 농업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05년 11월 4일 성명서 참조). “국회법에 의거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연내 쌀 협상 비준안 처리를 보장하되, 3자간 내실 있는 논의로써 근본적 농업회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한농연은 강조했다. 특히 “농업통상협상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 동 기구가 농업통상시스템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고, 근본적인 농업 회생 대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농연의 제안에 각 농민단체와 여야 정치권은 적극적인 환영 및 참여 입장을 개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5년 11월말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국회비준이 이뤄진 이후 3자 협의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는 가라앉게 된다.

다음 해 2월,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대한 중간 평가와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농림부 내 전문가협의회 운영 등의 대책이 국회에 보고된 후, 실질적인 정책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강제성 있는 중앙 농정 관련 협의체에 대한 논의는 2007년 대선 이후의 과제로 미뤄진 것이다.

2007년,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한 논의 및 전망

한농연은 지난 11월 5일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해,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13대 핵심 농정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농업계 내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대체로 보면 농정 현안에 대한 집약된 역량을 발휘하고 정부와 농업계간 거버넌스(협치)를 통한 농업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농업회의소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의견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듯 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농정심의회·농어업특위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고, 한나라당은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탁상공론식 농정시스템 개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농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국민중심당은 “농림부·농협·유통공사 등을 농민중심 조직으로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하였다. 창조한국당과 민주당 정도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는 농림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지난 11월말 “세계 주요국의 농민단체 현황 및 활동상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 농업회의소 등의 협치농정 기구의 설립·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선진국 농정 시스템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살필 수 있었다. 농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전문화되고 책임 있는 민간 주도형 농정추진체계를 만들어 나가야만,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단기적 차원의 비용 절감만을 논하는 것이 거버넌스(협치) 농정의 핵심이 아닌 것이다.

이제 농정 주체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농업 회생의 길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한농연은 앞으로도 근본적인 농권운동의 혁신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전 농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전제로, 정부와 정치권의 성의 있는 협력과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